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의 남북한 주도권 강화 방안
지경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최 재 덕*

❖ 요 약 ❖

협력과 갈등이 혼재한 동아시아에서 중국몽(中國夢)의 실현과 중국 중심의 거대 경제권 통합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중국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일본의 미일동맹 강화와 팽창주의, 강한 러시아 재건을 위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동아시아 정책이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해 한국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대륙과의 단절, 남북관계 경색과 북핵 위협 등으로 지경학적 가치를 강화할 수 없고, 지정학적 위기만 고조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 본 연구는 2018년 북한의 비핵화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대전환기를 맞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정에서 남북이 주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남북의 지경학적 협력에서 찾고자 하였다. 남북한 주도의 지경학적 요소의 강화는 한반도에서 강대국들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익공유 주체로 참여시킴으로서, 남북한의 주도권 강화로 이어지고, 미·중·일·러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교통, 물류, 에너지로 대륙과 연결하여 한반도의 지정학을 전략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경제 번영에 갖는 함의를 도출하려 한다.

핵심어: 지정학, 지경학, 남북경제협력, 남북한 주도권 강화, 동아시아 정책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옮겨 오면서 동아시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협력과 갈등이 혼재되어 있다.

『국가전략』 2018년 제24권 4호

* 원광대학교 교수

동아시아는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미중패권 경쟁, 영토 분쟁, 타이완 문제와 남중국해 분쟁, 북핵 문제, 자원과 에너지 확보, 역내 미중일과 인도의 군사력 강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냉전 종식 후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재편되었던 아시아의 세력균형은 미국 주도의 일극체제가 약화되고 다극체제의 태동과 다자주의 외교의 적극화로 구체화되고 있다. 아시아의 내재된 갈등은 중동의 경우처럼 직접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아시아 경제의 역동성 이면에 자국의 세력 확장과 힘의 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노골적인 정책들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현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과 중국몽(中國夢)의 실현을 위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아시아-유럽-아프리카 대륙의 지정학적 요충지를 일대일로라는 지경학적 수단을 통해 하나로 묶어 거대경제권 통합을 이루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팽창은 미국에게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형성된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를 경제협력을 통한 국가 발전의 기회임과 동시에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편입, 경제종속의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세일혁명 이후 에너지 독립을 이룬 미국은 지정학적 가치의 중심을 중동에서 동아시아로 변경하고,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통해 중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 동아시아에서 기존 패권국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있다. 자원 부국인 러시아는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가 계속 되자 동아시아로의 에너지 판로를 모색하기 위해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다. 최근 아베 정권의 팽창주의 정책도 동아시아의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이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분쟁을, 러시아와는 쿠릴섬을 두고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반도는 김정은 정권이 집권한 이후 북핵 위협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어 왔다. 북한이 2017년 말 ICBM 개발에 성공하고 미국 본토에 직접 타격이 가능해지면서 미국은 북핵문제에 초강경 대북제재로 북한 봉쇄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2018년 초 북한은 핵무기 완성을 선포하고 비핵화 선언과 함께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함에 따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정착의 대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들은 북한의 비핵화 선언을 적극 환영했다.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고 있는 미·중·일·러의 지정학, 지경학적 이익 계산법은 모두 다르겠으나 중·일·러의 대외적 지지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

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우호적으로 조성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21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한반도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동아시아 정책이 지정학과 지경학 중 어느 한 측면의 정책이 아니라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국의 세력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가 강대국의 고전적 지정학적 딜레마에서 벗어나, 대륙과 해양의 접점으로 한반도 지정학을 전략적 지정학으로의 적극적인 인식 전환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남북한이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남북한의 경제협력 강화로 대별되는 지경학적 요소의 강화에 있음을 주장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21세기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미·중·일·러의 영향력 확대가 그 목표와 수단을 지정학과 지경학적 관점에서 일치시키고 상호작용을 통해 두 관점을 강화시킴으로써 영향력 확보와 국력 강화를 이룬다고 분석하였다. 반면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미·중·일·러가 상정한 지정학적 요소가 압도적으로 작용해왔고, 북한의 핵무기 완성 선언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정점에 달하였다. 한반도는 남북분단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지경학적 가치를 강화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었다. 2018년 북한의 비핵화 선언으로 지경학적 가치를 강화하여 지난 1세기 동안 고조되었던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대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 기회를 통하여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미·중·일·러를 남북한 평화체제의 이익 공유 주체로 참여시킴으로써 지경학적 가치를 강화하는 것이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영향력에 흔들림 없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완성할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주도권 강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장에서는 미·중·일·러가 주력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책이 지정학과 지경학의 관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역내 자국의 영향력 확대 강화를 이끌어냄을 고찰한다. 3장에서는 한반도의 지경학적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이익 공유 주체로서 미·중·일·러와의 협력방안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마지막 4장 결론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과 함께 지경학적 가치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강대국들의 정치적 관여를 줄이고 남북한의 주도권 강화에 관한 함의를 도출한다.

2. 연구의 범위와 한계

1) 지정학과 지경학의 관계

지정학은 오래 전부터 국가의 경영이나 전쟁에 전략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1916년 루돌프 쉬엘렌(Rudolf Kjellen)이 "지정학은 국가를 지리적 유기체 즉 지리에 있어서의 현상으로 보고 고찰하는 국가론"이라고 정의하면서 지정학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였다. 그 후 근대적 의미에서 지정학에 대해 독일 정치지리학자 라첼(Friedrich Ratzel)은 국가를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그 정신은 토지에 묶여 있는 사람들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파악했고 국가도 진화의 법칙을 따르며, 인구의 증가로 국가의 생활공간이 충분하지 못하게 될 경우, 국가들은 새롭고 더 넓은 생활공간을 구성하기 위해 새로운 영토를 병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1] 이 사상은 하우스호퍼(Karl Ernst Haushofer)에 의해 나치 독일과 일본제국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지정학의 쇠퇴를 가져오기도 했다. 또한, 미국의 마한(Alfred T.Mahan)은『해양세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에서 '세계정치라는 것은 결국 바다를 제어하기 위한 계속적인 투쟁'이라고 보고 해양세력이 우세한 이유를 기동성과 교통의 편리성에서 찾았고 해양세력은 대륙세력에 비해 세계 각지의 자원과 지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 21세기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국의 해상권 강화를 기반으로 한 영향력 확대도 바다를 제어하기 위한 계속적인 투쟁으로 볼 수 있다.

'해양세력 우세론'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영국 지리학자 맥킨더는 '대륙국가 우세론'을 주장하였다.[2] 맥킨더는 "동부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심장지역(Heartland)을 지배하고, 심장지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도(World-Island)를 지배하며, 세계도를 지배하는 자가 전세계를 지배한다"[3]는 명제를 제시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1) Saul B. Cohen. 2003. "Geopolitics of the World Syste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13.
2) 이기택. 1997.『현대국제정치이론』. 서울: 박영사, pp.104-105.
3) Halford J. Mackinder. 1942.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New York: Henry Holtand Company,* p150.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장지역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스파이크맨(Nicholas J. Spykman)은 그의 저서『평화의 지리학 (*The Geography of Peace*)』에서 유라시아의 주변지역(Rimland of eurasian land mass)은 심장지역과 연안영해(marginal sea)의 사이에 위치하여 매개지역(intermediate region)으로 보아야 하며, 이 지역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광활한 완충지대(buffer zone)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세계 지배에는 유라시아의 심장지역이 아니라 전략적 주변지역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4)]

한국 지정학의 논의는 해방 후 간헐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1960년대 후반 홍시환, 차윤, 임순덕 등 지리학자들을 중심[5)]으로 논의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주로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개입 문제가 주를 이루었고 1990년대 이후 지정학적 논의의 주제가 다양화되었다. 지경학에 대해서는 김석환, 이경희, 최병두, 이민룡 등을 중심으로 대륙중심적 시각에서 에너지와 관련되어 논의되어왔다.[6)] 주로, 러시아, 연해주, 중앙아시아의 석유·가스라인 또는 대륙철도 연결 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지정학은 국가 이익의 달성에 유리한 지역 공간의 설정과 활용에 관한 것으로 접근성, 자원의 분포, 인종 등 물리적 차원의 토착적 요인이 국가 간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며, 주요국들이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국제관계의 본질로 파악하였다.[7)] 냉전종식과 함께 쇠퇴했던 지정학의 회귀는 현 동아시아 국제관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

4) Nicholas J. Spykman, 1994. "The Geography of the Peace," *New York: Harcourt, Braceand Company*, p 41.

5) 대표적인 연구실적으로는 홍시환. 1966. "지리적 요소로서 본 소련의 지전략 판단" 육군사관학교편『논문집』제4호 ; 차윤. 1972.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한국의 안전보장"『한반도』제11호 ; 임덕순. 1972. "한국 휴전선에 대한 정치지리학적연구"『지리학』제7호 등이 있다

6) 김석환. 2005.『유라시아시대와 한반도 철도 파이프라인 석유의 지정학』. 서울 CGAD; 이경희. 2006. "중앙아시아에너지에 대한 지정학과 주변국간 국제정치·경제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최병두. 2006. "변화하는 동북아시아 에너지 흐름의 정치경제지리"『한국지역지리학회지』제2권 4호 ;이민룡. 2008. "자원수급의 지정학과 한국의 자원외교"『정세와 정책』통권 143호

7) 이승주. 2017. "동아시아 지역경제질서의 다차원화: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작용," 한국과 국제정치 제 33권 제 1호, 170. 이승주는 고전적 지정학은 국가 간 관계를 설명하는 현실주의 계열의 설명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동아시아 국각 간 갈등과 협력의 이중동학은 '지정학(geopolitics)'과 '지경학(geoeconomics)'의 복합적 상호작용이라고 보았다.

의 지정학은 고전적 지정학과는 달리, 지경학과 더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지정학적 가치와 지경학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지경학은 '국가이익을 증진 및 수호하고 자국에 유리한 지정학적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 또는 '한 국가의 경제행위가 다른 국가의 지정학적 목적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8]으로, 국가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므로 지정학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21세기 지정학과 지경학의 관계는 국가의 다양한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지정학적 경쟁이 실제에 있어서 경제적 경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시간 차원에서 지경학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수단을 전술적 및 거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무역, 동맹, 다자 제도, 외교를 통해서 세계의 각 지역과 국가를 연결하고, 글로벌 문제 해결과 규칙 제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도력을 수립하는 것이다.[9] 지경학에 동원되는 경제 수단은 무역 정책, 경제 및 금융 제재, 금융 및 통화 정책, 원조, 사이버,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과 같은 것이며, 자국에 대해 타국의 긍정적 행위를 유도하거나 부정적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0] 따라서 21세기의 국제관계에서 지정학과 지경학은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국가의 역내 세력 확장을 견인한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 남북한의 주도권 강화를 한반도의 지경학적 요소의 강화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타임라인이 도출되지 않은 시점[11]에 북한의 비핵화

---

8) Blackwill, Tobert D. and Jennifer M.Harris. 2016. "War by Other Means: Geoeconomics and Statecraf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9) 강선주. 2018, "지경학(Geoeconomics)으로서의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IFANS* (*Instituet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주요국제문제분석, 3쪽.

10) Blackwill, Tobert D. and Jennifer M.Harris. 2016. "War by Other Means: Geoeconomics and Statecraf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1) 김정은 위원장 2018년 9월 5일 대북특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이루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김정은 '트럼프 첫 임기내 비핵화'…시간표 첫 제시, (검색일: 2018년 9월 6일)/ 9.19 평양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미국 참관 하에 폐기하고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준다면 영변의 핵기지를 폐기하는 등 추가적인 핵폐기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함.

절차와 대북제재 완화, 경제협력 가능 시점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움이 있기에 분석의 한계와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논문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성공적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강력한 UN대북제재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어 경제협력을 위한 환경 조성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의 '先비핵화'와 북한의 '先평화협정' 사이에 조율이 필요한 상태이다. 현재 UN대북제재 해제나 완화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발전적 시각에서 UN대북재제 해제와 완화와 같은 남북경제협력 여건이 마련될 것을 전제로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강대국 주도의 한반도 지정학적 딜레마에서 탈피하고 남북한이 지경학적 가치를 강화시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주도권을 강화하자는 논지는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지경학적 요인이 UN대북제재의 직접적이고 완전한 해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UN대북제재의 예외조항에 속하는 인도주의적 협력과 철도와 같은 열악한 북한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북제재 예외 신청 등의 허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지경학적 가치를 높여가는 것으로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에 상응하여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지경학적 요소를 강화할 수 있는 경제협력 대상을 일차적으로는 남북한, 이차적으로는 미·중·일·러의 다자 경제협력을 대상으로 하였다. 20세기 초부터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 고전적 지정학의 영향력을 강하게 미쳤던 강대국들의 21세기 동아시아 정책을 중심으로 고찰하기 위함이다. 동아시아에서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나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 대상인 아세안 국가들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넷째, 한반도 지경학적 요소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북한 중심의 경제협력은 개성공단과 남북 철도 연결을, 확대된 형태의 경제협력으로는 남·북·러 가스관과 송전망 연결 사업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선정 이유는 개성공단과 남북철도는 남북 경제협력의 수단으로서, 개성공단은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의 공간적 산물임과 동시에 공동 생산과 이익 공유의 실험구이고 남북철도는 상호소통, 물적·인적 자원 교류를 가시화하여 향후 남북경제협력을 촉진시키고 중국·러시아의 철도망과 연결하여 유라시아대륙을 거쳐 유럽까지 한반도의 경제지경을 넓히는데 필수적이다. 남·북·러 가스관·송전망 연결 사업은 남북경제협력에 있어 에너지의 수급이 핵심적이고 동북아에너지슈퍼그리드, 동북아에너지공동체로의 발전 가능성 때문이다.

Ⅱ. 21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미·중·일·러의 동아시아 정책

1. 21세기 동아시아 정세와 한반도의 현재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과 대외적 팽창에 대한 미국의 견제로 미국과 중국은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은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과 과잉생산을 해소할 판로를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로 확보를 위한 해상권 장악과 중국 중심의 거대통합경제권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는 급속한 성장으로 부를 축적한 중국의 지역패권주의에 대한 도전, 중화사상의 부활과 중국몽의 실현, 성장이 둔화된 중국 경제 발전의 활로 모색, 강대국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주변국 외교, 중국의 핵심적 주변지역인 동아시아 국가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수단이다. 중국의 일대일로를 통한 팽창주의와 해군력 강화, 남중국해 분쟁은 기존의 동아시아 질서를 중국 중심의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을 추동하는 1차적 요인으로 미중 갈등과 역내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0세기 초부터 동아시아에 개입해온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와 영향력이 축소되어 미중간의 힘의 균형이 중국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셰일가스혁명으로 중동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하락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이 동아시아로 이동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대체한 트럼프 정부의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이 인도-태평양으로의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팽창을 저지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이 동아시아에서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핵심 대외 전략은 강한 러시아의 재건으로 경제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위해 역동적인 아시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정학적으로 풀지 못 했던 중·러, 러·일 관계를 경제협력으로 강화하고 있다. 지정학적 요충지인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면서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로 경제 협력이 어려워지자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아시아에 에너지 판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에 파이프라인(시베리아의 힘1,2)[12] 통해 2019년부터 대량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예정

이며, 남·북·러 경제협력으로 극동지역의 경제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대규모 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수송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요구하였고, 미국은 이를 허용하였다.[13] 일본은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일본의 외교 전략으로 채택하여 중국 팽창을 억제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호주-인도와 함께 연합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8년 3월 육상자위대 소속 해병대인 수륙기동여단을 창설하여 연합훈련에 참여시키고 있다. 미국이 군사·안보 측면에서 인도를 중시한다면 일본은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인도와 경제협력을 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적 이익 우위를 차지하고자 한다.

2. 미·중·일·러의 동아시아정책: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1)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FOIP: Free and Open Indo-Pacific)'[14]

미국 중심의 세계 경제체제의 운영으로부터 획득되는 지경학적 이익은 안정된 지정학적 질서와 항상 동반될 수밖에 없다.[15] 19세기 전 세계의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계산과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주된 전략으로 내세웠다면, 식민지 획득이 어려운 조건하에서 강대국들에게는 군사적 수단보다 시장의 확대가 세계전략의 초점이 된다.[16] 닐 스미스는 이에 대한 예로 이라크 재건사업을 들었으며 점령 지역의 안보나 평화의 회복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세금, 무역 및 투자 관련 법률의 개정과 이에 따른 경제의 자유화, 국유 자원의 민영화, 이라크의

12) 시베리아 가스관 사업(시베리아의 힘1 프로젝트 power of Siberia1)은 가스프롬과 석유천연가스집단(CNPC)가 2014년 5월 합의한 것으로 러시아가 중국에 30년간 총 1조 1천 500억m2의 가스(4천억 달러 규모)를 중국 동부에 공급하는 내용임. 추가로 2014년 11월 시베리아의 힘2를 계약하여 2020년경부터 중국 서부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합의함. 시베리아의 힘 1,2가 가동되면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연간68bcm(billion cubic meter:10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음.

13) 일본은 미국의 LNG 수입을 미·일 안보동맹 강화로 이용하였고 2015년 9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법제를 도입함.

14) 2017년 12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2018 National Security Strategy)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전략공간이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에서 인도-태평양으로 대체되었음을 기술함.

15) Smith, N. 2005. "The Endgame of Globalization," *New York: Routledge*. p147.

16) Smith, N. 2005. "The Endgame of Globalization," *New York: Routledge*. p181.

은행, 광산, 공장 등에 대한 해외 소유권 법제화로 이라크 전쟁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중동지역 관여가 미국의 중동산 원유 확보에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17] 미국의 수많은 군사개입은 대부분 석유 때문이었고 중동산 석유와 수송로 확보는 미국의 핵심 국가 안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18] 실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적 분쟁은 대부분 에너지를 둘러싼 전쟁이었고 미국은 이란-이라크 전쟁,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1차 걸프전, 이란의 핵프로그램, 이라크 침공 등 지속적인 군사개입을 전개했다.[19] 에너지 독립 이전의 미국의 지정학은 철저히 원유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세일혁명 이후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고 쌍둥이 적자가 감소하여 비로소 미국은 미국의 외교·군사 정책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시킬 수 있었다.[20]

트럼프 행정부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은 서태평양과 동인도양의 해상 연속성에 기초하여 미국의 전략 공간의 지리적 중심축을 서쪽으로 이동시키고 환인도양(the Indian Ocean Rim)을 포함함으로서 동중국해에서 인도양에 이르는 중국의 해양굴기(海洋崛起)를 견제하기 위한 지정학적 전략이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구상(FOIP)' 역시 표면적으로 지정학적 전략이나 동시에 지경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지경학은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며, 지정학적 경쟁이 실제에 있어서는 경제적 경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지정학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현대 국제정치에서 지경학은 국가간 경쟁의 중요한 결전장(arena)이기 때문이다.[21] 지경학으로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해상 안보뿐만

17) 이승욱. 2015. "닐 스미스의 지리정치경제학, 제국, 그리고 신자유주의,"『공간과 사회』 제25권 4호. 67쪽.

18) 미국은 1970년 1차 오일 쇼크, 1978년 2차 오일 쇼크,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미국의 안전한 석유 공급이 위협을 받자 '카터 독트린'을 발표하여 중동 개입을 선언함. 카터 독트린은 중동지역을 어느 한 나라가 지배하려는 경우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막을 것이라는 내용임. 미국에 공급되는 석유 공급처와 수송로의 위협은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것임을 천명하고 미국 군사력을 중동지역으로 대거 이동함. / 이종헌, 2017.『에너지 빅뱅』, 서울: 프리이코노미북스, 121-122.

19) 이종헌. 2017.『에너지 빅뱅』, 서울: 프리이코노미북스, 122-132쪽.

20) 힐러리 클링턴 미 국무장관은 2011년 11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미국의 태평양 시대'라는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외교·군사 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시켰다고 발표함.

21) Edward N. Nuttwak. 1990. "From Geopolitics to Geo-economics-Logic of Conflict, Grammar

아니라 경제적으로 중국을 견제하여 미국의 안보 달성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의 경쟁을 의미한다.[22] 인도-태평양 구상은 인도양과 태평양, 아프리카, 아시아를 연결하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 공간을 형성하면서, 미국의 국익과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법의 지배, 항행의 자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 공정한 무역의 공동 추진이라는 가치의 틀을 역내의 새로운 파트너와 공유하고 중국의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전략'으로 발생한 해상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며,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중국의 공세적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호주, 일본, 인도와 연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아시아의 신흥국 중국과 인도를 기존의 질서에 편입시킴과 동시에 중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지경학적 접근인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아시아에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이다.[23] 인도와 미국의 관계는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 기업들의 인도 투자가 급증하고, 인도의 미국 방위장비 구입 규모가 2019년에는 180억 달러를 넘어설 예정이며, 양국 무역 규모는 2017년 기준 1260억 달러이다. 이에 미국은 기술·에너지·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 1억 1300만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혀[24] 중국의 남하를 저지하는 미국의 지정학적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역내 지경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정부 재정 배분 상의 우선순위와 다자 국제기구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 양자주의 선호로 볼 때 다자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체계적으로 실행할지에 대한 의문과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인도의 참여 의지와 능력, 경제 공간으로서 인도-태평양의 비적합성 등이 인도-태평양 구상의 불완전성으로 논의되고 있다.

---

of Commerce," National Interest (Summer), pp17-23.

22) 강선주. 2018. 지경학(Geoeconomics)으로서의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IFANS(Instituet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주요국제문제분석, 3쪽.

23)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술과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을 중심으로 1억 1천 300만 달러(약 1천 266억 원)을 투입하는 신규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에 1조 달러(1천 119조 원)를 들여 추진하는 것에 0.01%에 불과한 규모임. 연합뉴스, 폼페이오 "인도태평양에 1천 200억원 투자"···中 '일대일로' 맞불, (검색일: 2018년 9월 1일)

24) 2018년 7월 30일, 미상공회의소 주최 비즈니스포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비전' 연설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투자에 대해 밝힘.

2) 중국의 일대일로 (一帶一路)

지경학과 지정학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의 부상이 초래하는 체제적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부상은 분명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25]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는 주창하면서, 저성장 뉴노멀 시대를 맞아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고, 연선국과들과 개혁 개방, 화해 공영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에 새로운 新성장 동력을 공급하고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통합되고 연결된 거대경제권을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일대일로는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였던 실크로드 개념을 확장시켜,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살실크로드와 중국-동남아-서남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를 잇는 거대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한 통합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하여 동아시아를 기반으로 중국몽의 실현,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신흥대국관계를 중심으로 한 주변국 외교, 해상권 장악과 지역 패권주의에 도전하는 등 지정학적 우위를 꾀하면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 견인,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 촉진,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과 공급로 확보 등 지경학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2017년까지 일대일로 사업으로 68개국에 지원한 자금은 총 8조 달러이며, 차관 형식을 통해 인프라 구축과 정비에 사용된 자금은 완성 후 인프라 운영 수익으로 중국에 부채를 상환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일대일로에 협력할수록 국가 부채가 급증하는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며 일대일로에 참여했던 저개발국가들의 부채비율이 35%에서 126%로 급증하여 금융취약국으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26] 중국이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진행했던 항만 건설의 경우, 스리랑카는 부채미상환[27]으로 대형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서남아시아 최대항구인 함반토타항 운영권(99년)을 중국에 넘겼고, 항구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해군 군함과 잠수함 기항도 가능해져 중국 해군의 보급기지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건설이 중단되었던 스리랑카의 콜롬보항도 과도한 부채를 인프라 건설로 일부 상환하기로 하여

25) 이승주. 2017. "동아시아 지역경제질서의 다차원화: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작용," 『한국과 국제정치』 제 33권 제 1호, 172쪽.

26) NEWSIS, 中, '일대일로' 68국에 8조달러 지원…8개국 금융취약국 전락,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305_0000243066 (검색일: 2018년 9월 1일)

27) 중국수출입은행이 총 공사비의 85%를 지원함.

다시 진행중이며, 중국이 43년간 운영권을 따낸 파키스탄 과다르항의 경우 파키스탄에서 유일하게 대형 선박이 드나들 수 있는 항구로 세계 석유 공급량의 4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위치해 있다. 중국은 이 항구의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해군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미얀마에서 진행중인 차우퓨크항도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중국 내륙에서 인도양을 통해 중동 산유국까지 우회로 확보가 가능하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 대상 지역을 중국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선정하고 협력국가의 경제규모와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차관 제공[28]으로 공동 개발한 인프라 사용을 독점함으로써 인도양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대일로구상이 성공할 경우 기존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성공함으로써 상당한 지역이 중국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고, 육상-해상실크로드 권역인 환인도양,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와 국제정치 분야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아시아-유럽-아프리카의 거대 경제권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행 5년 차에 드러나는 중국의 패권주의, 해상권 강화, 해외군사 기지 건설 및 인도양 주요 항구의 장기 조차 등과 일대일로 인프라 건설 협력 국가의 경제 주권 침해는 지경학적 수단인 일대일로를 이용한 중국의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중국의 이러한 영향력 확대 전략은 중국이 그 동안 주장했던 평화굴기, 평화발전에 대한 담론, 일대일로의 기본이념과 중국의 패권주의적 성향이 상충함으로써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부채의 덫에 빠지고, 반중 감정이 확산, 불공정 계약에 대한 피해와 소송 급증으로 인한 사업 중단, 사업 전면 재검토 등 해당 국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29] 영국, 프랑스,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일대일로 사업 협약을 거부하고 일대일로 참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3)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New East Policy)

러시아는 저유가와 셰일가스 혁명, 크림반도 강제 병합으로 인한 미국과 유럽의

---

28)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는 78개국의 평균 신용등급을 'Ba2'로 평가하여 채무불이행 수준이며, IMF 최대출자국인 미국은 IMF 지원금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것을 우려해 무리한 일대일로 사업으로 금융위기에 빠진 국가들(파키스탄, 라오스, 지부티 등)에 대한 IMF 지원을 반대하고 있음.

29) 최재덕. 2018. "일대일로의 이론과 실제: 중국의 지역패권주의 강화와 일대일로 사업추진에서 발생된 한계점"『한국동북아논총』, 제23집, 제3호. 34-37쪽.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전히 자타가 공인하는 에너지 강국이다.[30]구소련 붕괴 이후 쇠락했던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되찾고 강한 러시아를 표방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의 지정학적 접근이 있어서 가능했다. 조지 프리드먼은 "푸틴은 러시아가 서구와 경쟁할 수 있는 산업국가로 러시아를 만들기보다 금속·곡물·에너지·천연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더 집중했다, 이 전략은 지속가능한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 러시아를 지탱해 주었다는 점에서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31] 러시아 경제에 에너지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수출 대상국은 대부분 유럽이다.[32] 러시아는 PNG(Pipeline Natural Gas)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서유럽과 CIS국가들의 반러시아 정책에 대항하여 PNG 공급 벨트를 차단하고 공급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정치적으로 사용하기도 한다.[33]러시아가 2009년 승인한 '러시아 연방 에너지 전략 2030'에 따르면 기존의 석유, 가스 매장지가 점차 고갈되는 것에 대비하여 동시베리아, 극동, 야말반도, 북극해 등 신규매장지를 적극 개발하는 것과 동시베리아와 극동의 석유·가스 생산비중을 늘리고[34] 에너지 공급 안보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석유, 가스 수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35]

푸틴 정권의 신동방정책은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핵심은 동북아시아에 안정적인 에너지 판로를 개척하는 것으로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 개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극동지역의 '선도개발구역' 지정, 극동개발부 신설, 블라디보스톡 자유항으로 지정하였으며, 동북아 국가와의 경제·에너지 협력 촉진과 외국인 투자 유치[36]를 위한 '동방경제포럼(Eastern

30) 원유 생산 세계 1위(2016),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2위(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량의 16.3%, 2015), 석탄 생산량 세계 6위(2016)이다. 러시아의 보유 매장량은 원유 매장량 세계 5위(세계 원유매장량의 6.4%, 2016),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세계 매장량의 17.3%, 2015), 석탄 매장량 세계 3위 (세계 매장량의 14%, 2015)이다.

31) 조지 프리드먼. 2018.『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전략』. 서울: 김앤김북스, 216쪽.

32) 석유와 천연가스 수출이 정부 재정수입의 50%를 상회하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으로 판매하는 천연가스는 총 수출의 70~80%임.

33) 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대체할 에너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EU의 러시아산 PNG 의존도가 33.5%(2016)까지 증가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이전보다 더욱 심화됨.

34) 석유 생산을 2008년 3%에서 2030년 18~19%까지 늘릴 계획이고, 가스 생산 비중은 2008년 2%에서 2030년 15%까지 늘릴 계획임.

35) 외교부, 2010 러시아 개황, http://down.mofa.go.kr/www/brd/m_4099/view.do?seq=367514 (검색일: 2018년 8월 10일)

Economic Forum)'을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극동·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국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아·태 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극동·시베리아 지역은 러시아 면적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개발 잠재력이 높음에서 불구하고 척박한 환경과 619만 명의 적은 인구 규모, 열악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개발이 미진한 실정이다.[37] 에너지 정책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한 송유관 ESPO 1,2 프로젝트에 있어 시베리아의 힘1,2 프로젝트까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2009년 완공된 ESPO-1과 2012년 완공된 ESPO-2를 개통하여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의 약18% 정도가 ESPO 1,2를 통해 아시아로 수출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천연가스부분 협력 '시베리아의 힘' 프로젝트는 러시아에서 중국까지 동부지선을 통해 2018년부터 38bcm을, 2020년부터 서부지선을 통해 추가로 30bcm을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 러시아는 동아시아 경제 발전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나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가 경제발전과 안보와 직결되는 동북아시아의 상황으로 볼 때 러시아는 에너지를 통한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역대 한국 정부는 북한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을 시도했으나 안보불안 문제로 추진하지 못 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러의 가스관 연결이 현실화되면 세계 2위의 액화천연가스(LNG)수입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정책 다변화, 공급 안정성, 경제성뿐만 아니라 남북러 3각 에너지협력을 통한 경제협력기반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극동 시베리아 개발정책 추진 방향이 '극동 시베리아 지역을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으로 통합'하고, '에너지·광물·어업·임업·자원개발 및 물류수송망 확충을 통한 자생적 경제성장 기반 확보'로 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9-Bridege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

36) 경제특구설정, 고급인력에 대한 고용허가 완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제도, 하이테크 상품에 대한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러시아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투자 절차, 비효율적인 관료주의, 부패 등으로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이 시급함.

37) 외교부, 2018 러시아 개황, http://down.mofa.go.kr/www/brd/m_4099/view.do?seq=367514 (검색일: 2018년 8월 1일)

4)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 참여와 인도와의 경제협력

인도-태평양 구상은 2010년 일본과 중국 간의 센카쿠제도 분쟁 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발생한 희토류 사태 이후 일본이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중투자를 인도로 대대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부터 출발했다. 이후 아베정권은 중국 시진핑 체제의 중화민족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도-태평양전략을 발전시켰다.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해상력 강화로 인한 해상 안보 위협은 일본, 호주, 인도에 의해 공유되어 왔고, 트럼프 정부가 전략적으로 중국의 해상권 장악을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안으로 인도-태평양 구상을 강화하였다. 지금까지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해상안보를 목적으로 한 지정학적 접근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일본은 지경학적 접근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공적개발원조(ODA)의 70%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2016년도 ODA는 168억 달러에 달했고, 이 가운데 양자간 원조 지원 규모는 135억 달러였다. 일본은 인도에 18억 달러, 베트남에 16억 달러, 이라크에 6억 달러, 아프가니스탄에 2억 6700만 달러를 원조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일대일로 구상이 난항을 겪자 아프리카 끌어안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중국에 대응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동남아시아부터 중동지역, 아프리카까지 확장할 계획이다.[38] 미국 호주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고품질 인프라 개발을 촉진하고, 재정력과 사업규모를 중국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합의했다.[39]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동하려면 역내 국가들과의 실제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지경학적 요소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인도-태평양 구상에 참여하는 국가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전략적 구상으로써 실효성 있게 작동할 것이다.

---

38) 일본은 2017년 '아시아-아프리카 성장 회랑(AAGC: Asia Africa Growth Corridor)'를 제안하고 3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함.

39) 일본, 인도태평양 지역개발 지원에 총력…중국견제..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 key=20180816010008114 (검색일: 2018년 9월 3일)

Ⅲ. 한반도의 전략적 지정학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

1. 한반도 지정학에 대한 전략적 전환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해양 국가의 대륙진출을 위한 길목으로 여겨져 계속되는 침략에 시달렸으며, 19세기 말 제국주의가 본격화되던 시기에는 열강들의 이권침탈과 20세기 일제 강점기, 해방 이후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이어지면서 냉전시대에는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의 최후의 방어선으로 냉전 종식 후에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열강들의 세력 균형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질곡이 계속되는 동안 한반도의 지정학은 강대국들의 팽창의욕을 합리화시키는 결정론적 지정학에 예속되었고, 한반도의 암울한 역사는 지정학적 위치에 의해 불가피했던 것으로 불변의 요소이며, 극복할 수 없는 단점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한반도는 태평양과 아시아 대륙을 매개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의미가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는 숙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이었다면 냉전시기에는 해양화를 통한 발전을, 탈냉전 시기에는 대륙과 해양으로의 전방위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화 되어가고 있다.[40]

북한은 2013년 제 2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노동당 전략노선으로 채택하고 핵무기 개발이 본격화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최고점에 올려놓았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공식화하면서 보다 업그레이드된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려고 하였고, 그것은 기존 경제특구 전략을 지역적·산업적 확대를 포함한 경제개발구 정책으로 구체화[41]하였으나 계속되는 핵실험으로 UN 대북제재가 정책적 실효성을 크게 거두지 못 하였다.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과 북한의 남측 인력 추방, 남측 자산 동결 및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경협도 전면 중단되었다. 북한은 '경제-핵

40) 박종상. 2012. "한반도의 지정학적 분석과 국가발전전략".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41) 나용우,장성호. 2017. "김정은 시대의 대외개발정책과 남북경제협력: 경제개발구 전략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모델의 모색,"『평화학연구』 제 18권 4호 279쪽.

병진노선'을 채택한지 5년 만인 2018년 4월, '경제 건설,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승리를 공표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당의 노선을 전환하였다. 한반도는 북한의 비핵화 선언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체제보장 및 경제발전에 합의하면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으며 남북한의 협력으로 한반도의 지경학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북한의 비핵화 선언과 비핵화를 위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동아시아의 안보 불안을 종식시키고 냉전시대의 적대관계를 청산함과 동시에 한반도가 대륙의 시작점으로, 해양으로의 출발점으로 교통, 에너지, 물류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평화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동북아 경제 지도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한반도가 불리하게 작용했던 고전적 지정학에서 탈피하여 전략적 지정학의 관점에서 지경학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2. 남북한 중심의 경제협력

1) 개성공단

개성공단은 최초의 남북합작 공단으로 남북화해교류협력과 남북경제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2000년 6·15공동 선언 후 남쪽의 현대 아산과 북쪽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이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공단 조성의 단초가 되었으며 2004년 6월 9만 3000m2 면적의 시범단지가 조성되고 2007년 1단계 분양 및 1단계 1차 기반시설이 준공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개성공단은 북한 기갑사단, 포병 여단 등 5만여 명과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 부대가 배치되어 있던 곳이다. 현실주의적 시각에서도 개성공단의 설립 및 운영으로 인해 북한 군부대 특히 포병부대가 후방으로 이동한 것은 남한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일반인으로서 故정주영 회장이 국경을 넘기까지 50여년이 걸렸지만,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후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자동차, 버스, 트럭은 1,177,594회 국경을 통과했다. 2012년에는 자동차, 버스, 트럭이 영업일 하루당 682회 국경을 넘어 시간당 운행 대수로 환산하면 29대가 넘는다. 개성공단이 생긴 결과 일반인들에게도 남북 간의 국경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 아니며 남한 사회의 일상

모습 중 한 장면을 연출하는 공간이 되었다.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에 의하면 2011년과 2012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과 비슷했고 2013년과 2014년에는 오히려 찬성 비율이 높았다. 개성공단은 단순히 경제협력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을 지니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국민들이 의식하고 있다.[42] 생산현황은 2010년 3억 2천 달러, 2011년 4억 달러를 비롯하여 누계생산액 12억 6천만 달러를 넘었고, 근로자 현황을 보면 2005년에 북측 근로자 6천 명에서 2012년 1월 5만 명을 넘었다.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변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받았다. 개성공단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이유로 2013년 4월 8일부터 9월 15일까지 북한 근로자 철수 조치가 있었고, 북한의 핵실험, 연평도 포격, 장거리미사일 발사, 공단 노동자 최저 임금 인상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다가 2016년 2월 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2월 10일 남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설립 이래 11년 2개월 만에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선언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자고 합의했고,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단 입주 기업 대상으로 한 설문에 응답한 기업 101곳 중 95%가 재입주 의지를 나타냄[43]으로서 대북제재 완화 조치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을 넘어서는 민족화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남북이 매일 상생하는 평화의 공간이었다. 개성공단은 남북의 경계선, 접촉면, 접촉방식 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고 남북한의 시간적 거리와 공간을 축소함으로써 상호이익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44] 개성공단은 과거에도 남북협력의 유일한 지경학적 사례였고, 남북협력의 작은 시험장이었다. 앞으로 개성공단의 규모와 역할은 더욱 확대되어 한반도신경제지도의 환서해 경제벨트의 중심으로 경의선을 통해 대륙으로 연결될 것이다. 개성공단은 많은 한계와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한이

---

42) 김병로, 김병연, 박명규, 2015.『개성공단: 공간평화의 기획과 한반도형 통일프로젝트』. 과천: 진인진. 172-173쪽.

43) 개성공단 기업들 “곧 방북 신청…연내 재가동 위한 시설 점검.”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27006004&wlog_tag3=naver (검색일: 2018년 9월 26일)

44) 김병로, 김병연, 박명규, 2015.『개성공단: 공간평화의 기획과 한반도형 통일프로젝트』. 과천: 진인진. 155쪽.

끊임없는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남북경제협력의 새롭고 창의적인 경제모델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개성공단의 확대는 남북한 경제공동체실현의 구심점으로서 남북한 주도의 경제협력으로 한반도의 지경학적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남북철도연결 사업과 동북아철도공동체구상

〈그림 1〉 한반도 종단열차와 대륙철도의 연결



출처: 박영석, 우리나라 대륙철도 길 열렸다, 연합뉴스, 2018년 6월 7일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1990년부터 논의 되었고 1992년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해 채택한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라는 합의 사항에 의해 2002년 9월, 동해선 철도 연결공사 착공식, 2003년 6월, 경의선과 동해선의 군사분계선 상에서 남북의 철도 궤도 연결식, 2007년 5월 17일 금강산역~제진역 간 25.5km 구간 시험운행이 진행되었다가 남북관계 경색으로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한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작업이 구체화되었다. 남북은 현지 공동조사를 7월 20일에 동해선 북측 구간(금강산청년역~군사분계선), 7월 24일에 경의선 북측 구간(개성역~군사분계선)에 대한 공동조사가 진행하였다. 남북 철도 연결은 남북의 인적·물적 교류를 하나로 잇는 기본 인프라로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이다. 동해선과 경의선은 부산에서 원산과 나선을 거쳐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환동해 벨트와 전라도와 수도권을 지나 개성과 신의주를 거쳐 중국까지 이어지는 환서해 벨트

의 중추로서 에너지와 자원, 교통, 물류, 산업을 발전시킬 기반으로 남북한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과 공동번영의 상징이다. 2018년 6월 북한의 동의로 한국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Organization for Cooperation of Railway)에 정회원으로 가입[45]함에 따라 유라시아 대륙철도 노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 남북 철도 연결과 동해선의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결, 경의선의 중국횡단철도(TCR)와의 연결로 부산부터 유럽까지 이동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해선[46]의 경우 현재 부산에서 경북 영덕까지 운행중이며 영덕~삼척까지 122km구간은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다. 동해북부선에 속하는 강릉~제진 간 104km구간은 단절된 상태이나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동해선이 완성되어 부산-북한-시베리아횡단열차로 유럽으로 연결되면 해상운송에 비해 거리는 8,380km가 단축되고 수송 기간도 30일에서 14일로 단축되는 등 거리와 기간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 동해선은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 금강산~원산 관광지구 구축 촉진, 설악산과의 연계 관광을 현실화시켜 동해권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의선[47]은 서울~개성~사리원~평양~신의주에 이르는 518.5km의 복선철도이다. 남북 철도 노선 중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경의선이 북한의 주요 인구, 산업 밀집지역을 통과하고 개성 특구와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의선과 동해선이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횡단철도(TMGR), 만주횡단철도(TMR), 중국횡단철도(TCR)과 연계되면 한반도가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유라시아 경제로 편입되고,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무역량 증가로 얻는 이익은 물론이고, 높은 대중국 무역의존도로 인해 잠재적으로 안고 있었던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한다. 또한 철도의 연결은 경제특구 활성화, 배후지 확보, 공단 조성 등을 촉진하여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에 걸친 메가 경제권 형성에 크게

45) 우리나라 대륙철도 길 열렸다...北협조로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2018년 6월 7일).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7/0200000000AKR20180607092100003.HTML?input=1179m (검색일: 2018년 6월 8일)

46) 일제가 함경남북도와 강원도지방 자원 수탈하여 전쟁 물자 수송을 위해 1937년 12월 1일 개통하였고 남북 분단 이후 운행이 중단되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해북부선(안변-양양, 192.6km), 동해중부선(양양 포함), 동해남부선(부산진~포항, 145.8km)임.

47) 일본이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 직후 '임시군용철도감부'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경의선부설을 감행하였다. 일본 세력의 만주 확장을 위한 군용철도의 목적으로 부설함.

기여하여 철도가 연결된 국가들이 이익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남북철도연결 사업에 대해 북한 비핵화의 불확정성, 대북제재, 북한 선로의 노후화 및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과 경제성, 인프라 개발에 대한 법, 제도의 차이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요소를 생각할 때 대륙 경제와 연결되고, 물류비용이 감소하며, 국제경쟁력 향상과 남북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아진다. 무엇보다도 남과 북이 원하는 최우선 사업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며,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이 참여하는 동북아철도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다자협력기구가 부재한 동아시아에 경제안보공동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48] 남북의 경제적 번영의 토대인 철도·도로·항만 등의 인프라 구축 없이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수 없는 만큼 우려되는 점은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장점을 극대화하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남북 경제발전에 전략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3. 남북한과 제3국가와의 경제협력

1)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은 필수적이다. 철도, 도로, 항만 등의 인프라 확충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의 핵심은 동북아시아에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북한을 지나는 한반도 가스관 프로젝트는 러시아의 주요 이슈이다. 한국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지리적으로 가깝고 발전용, 도시가스용 수요가 많은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으로 탈원전과 국제 기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 규제 강화로 그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석탄 위주의 에너지 생산에서 석유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최소화 하면서 천연가스 비중을 늘리는 정책이 합리적일 수 있다.

---

48) 2018년 8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외교협회에서 열린 CFR·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후 추진하게 될 경제협력에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함. /문대통령, 유엔외교 후 귀국길…2차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성과, (2018년 9월 27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6/0200000000AKR20180926040200001.HTML?input=1195m(검색일: 2018년 9월 27일)

〈그림 2〉 한·러 가스관 연결 구상



출처: 권칠승 의원실 '한·러 PNG 공동연구', 가스공사

한·러는 25년 전인 1993년부터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나 북한의 불확실성으로 여러 차례 무산되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PNG사업에 대한 제의를 받았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다 2011년 8월 울란우데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 가스관의 북한 영토 통과에 합의한 바 있다. 국제 사회의 지속적인 제재와 남북관계 경색으로 외화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북한이 받게 될 한 해 3억 달러 이상의 통과료가 큰 작용을 했을지도 모른다.[49] 북·러는 2011년 한·러 정상회담에 맞추어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의 구체적인 일정까지 발표했으나 한 달 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2012년 남한의 정권 교체, 2013년 3차 핵실험으로 PNG사업은 전면중단 되었다.[50]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북한을 경유하는 한러 PNG 사업 추진에 큰 관심을 보여 왔다. 2018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방문으로 남북러 3각 협력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고, 2017년 동방경제포럼에서 문대통령이 제안한 나인브릿지(9-bridge) 구상에 대한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철도·전력·가스 부분에서 우선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가스공사는 러시아 민간 천연가스 생산업체 노바텍과 '북극LNG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 등을 전제로 향후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은 양국 가스관 연결과 관련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비하여 경제성과 기술성을 검토에 착수한다.[51] 한국과 러시아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정착에 공감대를

49) 이종헌. 2017.『에너지 빅뱅』, 서울: 프리이코노미북스, 304~306쪽.
50) 강태호 외. 2014.『북방루트 리포트』. 경기: 돌베개, 317쪽.

형성하고 남북러 협력을 약속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 이후의 남북 경제발전의 방향과 속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며, 실질적으로 러시아를 통해 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서 북·중·러 초국경지역의 경제 특구, 개성공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Greater Tuman Initiative) [52] 등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북한의 열악한 에너지 수급 상황을 크게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남·북·러 송전망 연결로 구체화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

〈그림 3〉 동북아 슈퍼그리드 연계도



출처: 한국전력

북한의 산업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력공급이다. 현재 남한과 북한 간 전력 생산 격차는 14배 이상이며, 한국전기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설비용량은 남한의 12분의 1, 발전량은 24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전력 산업정책은 해방 후 1950년대까지는 수력 중심, 1960년대 이후 수력·화력 병행,

51) 한러 전력·가스망 공동연구 추진···남북러 경제협력 '청사진'.(2018년 6월 22일).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2/0200000000AKR20180622158800003.HTML?input=1179m (검색일: 2018년 9월 1일)

52) 광영두만강개발계획(GTI)은 북한 나진·선봉과 중국 동북3성(흘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러시아 연해주 일부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을 개발 대상으로 하는 협의체임.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5개국이 참여하여 두만강 유역을 교통, 운송, 관광, 제조, 가공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교역 및 투자 촉진을 통해 역내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며 UNDP 지역사업으로 1995년 출범함. 북핵문제와 지역정세불안정으로 사업추진 동력이 미약해짐.

김정은 정권 이후에는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의 원자력 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초기 단계이다. 북한의 전력발전설비가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송전 도중 발생하는 전력 손실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는 2015년 북한 핵실험으로 나진항 개발이 중지되자 2016년부터 전력 연계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미 구체적으로 연해주와 북한 나선 경제특구 간 계통 연계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나 블라디보스토그에서 청진까지 380km에 이르는 송전선 건설비용 약 1억 6천만 달러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건설비용도 문제지만 북한이 러시아 전기를 사용한다고 해도 사용료를 지불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남·북·러 전력망 연계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러시아는 최대 수력발전소인 부레야발전소를 신설하여 공급능력을 확보했고 야쿠치아(Yakutia) 남쪽 우추르(Uchur)강과 팀프톤(Timpton)강에 건설되는 대규모 수력발전소와 하바롭스크 지역의 투구르(Tugur)에 대규모 조력발전소도 예비 전력으로 사용가능하다.[53] 지난 10년간 HVDC(초고압직류송전,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송전방식의 상용화로 장거리 송전에 따른 전력 손실문제가 해결되어 러시아에서 경기 북부까지 전력 손실 없이 송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 극동지방의 수력은 연간 1,139TWh로 추정된다. 한국의 2016년 전력 총 생산량이 526TWh로 극동지방 수력발전용량은 그 2배에 이른다. 러시아는 저렴한 원가의 수력 발전 전력의 수출을 통해 극동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전력난이 심각한 북한으로서는 러시아 전력의 통과료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필요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한국은 에너지 정책의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남·북·러 에너지협력을 기반으로 남북경제협력에 추가로 소요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유럽의 데저텍 프로젝트(Desertec Project)[54]와 같은 에너지슈퍼그리드를 동북아시아에 실현하자는 동북아시아 슈퍼그리드 구상이 북핵문제로 몽골과 러시아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해저케이블로 연결해야하는 비경제성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 하였다.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으로 북한을 통한 송전이 가능해지면

53)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2017.『neo Nordpolitik, 북방에서 길을 찾다』. 서울: 디딤터, 122쪽.
54) 데저택은 사막(Desert)과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합성어로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과 서남아시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해저케이블로 유럽에 내는 프로젝트로 유럽의 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 2050년까지 유럽 전체 전력 사용량의 15%를 충달할 계획임.

현실성과 경제성에 기반한 동북아슈퍼그리드 형성이 가능하다. 2017년 9월 3차 동방경제포럼 연설에서 문 대통령도 '동북아슈퍼그리드'를 적극 제안했고 동북아시아 수퍼그리드가 동북아의 경제번영과 평화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로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남북한이 러시아와의 송전망 연결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러의 에너지 협력은 남북의 경제협력과 국토 균형발전, 동북아 국가와의 다자협력 모델 개발에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 더 나아가 남북러의 에너지 협력은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을 잇는 세계최대의 에너지슈퍼그리드 구상의 현실화를 앞당기고 에너지 공유를 바탕으로 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아시아의 강대국들을 국제질서과 규범의 틀 안에서 동아시아 이익공동체로 협력하게 함으로써 지경학적 가치의 강화 기반 위에서 더 공고해 질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협력과 갈등이 혼재되어 있는 현 동북아 상황을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일러 강대국의 국제 정치를 지정학과 지경학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통한 협력과 중국 일대일로와의 대립, 동북아시아로 에너지 판로를 모색하며 재건을 꿈꾸는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한반도는 북한의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정상국가화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전략적 지정학으로 전환하여 대륙과 해양을 교통·에너지·물류로 연결함으로써 지경학적 가치를 높이고, 한반도의 정치적 이권을 행사하는 강대국들을 동북아 평화 이익의 공유 주체로 참여시켜 함께 상생하는 다자경제협력, 이익공동체를 추구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전략적 지정학과 지경학적 접근으로 지켜나갈 수 있음으로 주장하였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남북한이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남북한의 경제협력 강화로 인한 지경학적 요소의 강화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미국 기반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수정주의 도전국의 부상으로 규정[55]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구상과 미중무역전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 동아시아는 양자간의 FTA와 더불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RCEP(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 Regional Con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IORA(환인도양연합: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등 다자간 협력기구와 미·중이 펼치고 있는 전략적 구상 사이에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국제관계를 이루고 있다. 역내 국가들은 국제규범과 질서 내에서 자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지정학적 접근의 적극적인 수단으로 지경학적 요소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역내 국제정치 환경을 면밀히 파악하여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동북아 평화 실현으로 함께 공유할 공동이익과 가치 창출을 강조하여 이익공동체로서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한 가지 주지해야 할 점은, 미국은 동아시아 패권국이면서 한반도 휴전협정 당사국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대북경제제재 해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체이면서 한반도 평화에 따른 이익 공유 주체로서,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이익 공유의 몫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익이 북미관계 진전을 적극적으로 추동할 기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 평화구축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함께 다자간 경제협력을 통한 미국의 경제적 이익 공유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천명하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북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북중간 협력이 긴밀해지면 한미관계나 북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한반도는 남북 분단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북핵문제로 인해 한반도의 지경학적 가치를 강화할 수 없고, 지정학적 긴장만 심화되는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었으나 북한의 비핵화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지경학적 가치 강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해방 후 한반도

55) 2018 NSS는 러시아와 중국은 수정주의적 도전국으로 지목함.

를 둘러싼 열강들의 지정학적 경쟁에 고립되어 있었던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분단의 현실과 고착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한 세기만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를 맞아 남북한이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경제협력으로 한반도의 지경학적 가치를 강화하여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강대국들의 정치적 이익 논리에서 벗어나야만 남북의 평화, 번영, 화합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중단 없는 시행을 보장하고 한반도를 과거와 같이 강대국의 지정학적 이권에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한 중심의 경제협력을 구심점으로 강대국들을 한반도 경제 이익 공유의 주체로 남북한과 협력하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지경학적 가치를 강화시켜야 한다. 남북한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대북제재 해제까지 많은 여정이 남았으며 그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지경학적 접근으로 이루어지는 남북한의 주도권 강화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력하게 추동하는 요인이며 남한과 북한이 원하는 경제적인 청사진의 실현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과 같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시험적으로 시도했던 남북경협이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더 안정적이고 발전된 형태로 남북한 번영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고 교통·물류·에너지로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결을 통해 한반도 지정학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때 남북한이 민족 경제 번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제적 번영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과 이익 공유를 통하여 그 합리성과 당위성을 갖게 되고 항구적으로 유지될 동력을 제공받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지경학적 가치의 강화는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추구해왔던 동북아 다자안보공동체, 동북아에너지슈퍼그리드,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경제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투고일: 2018.10.17
심사완료일: 2018.11.05
게재일: 2018.11.30

참고문헌

강태호 외. 2014.『북방루트 리포트』. 경기: 돌베개.

김병로, 김병연, 박명규. 2015.『개성공단: 공간평화의 기획과 한반도형 통일프로젝트』. 과천: 진인진.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2017.『neo Nordpolitik, 북방에서 길을 찾다』. 서울: 디딤터,

이기택. 1997.『현대국제정치이론』. 서울: 박영사, 104-105쪽.

이종헌. 2017.『에너지 빅뱅』, 서울: 프리이코노미북스, 122-132쪽.

조지 프리드먼. 2018.『21세기 지정학과 미국의 패권전략』. 서울: 김앤김북스, 216쪽.

강선주. 2018, “지경학(Geoeconomics)으로서의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 *IFANS* (*Instituet of Foreign Affairs & National Security*). 국립외교안보연구소.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12.

나용우, 장성호. 2017. “김정은 시대의 대외개발정책과 남북경제협력: 경제개발구 전략을 활용한새로운 협력모델의 모색.”『평화학연구』, 제 18권 4호. 279쪽.

박종상. 2012. “한반도의 지정학적 분석과 국가발전전략”.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이승욱. 2015. “닐 스미스의 지리정치경제학, 제국, 그리고 신자유주의.”『공간과 사회』. 제 25 권 4호

이승주. 2017. “동아시아 지역경제질서의 다차원화: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작용.”『한국과 국제정치』 제 33권 제 1호, 170쪽.

이용화, 홍순직. 2012. “개성공단 사업 평가, 전문가와 입주기업 설문조사: 3통과 기숙사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최재덕. 2018. “일대일로의 이론과 실제: 중국의 지역패권주의 강화와 일대일로 사업추진에서 발생된 한계점”『한국동북아논총』, 제23집, 제3호.

개성공단 기업들 “곧 방북 신청...연내 재가동 위한 시설 점검”. (2018년 9월 26일).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92700 6004&wlog_tag3=naver (검색일: 2018년 9월 26일)

문대통령. 유엔외교 후 귀국길...2차 북미정상회담 가시화 성과, (2018년 9월 27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26/0200000000AKR2018

0926040200001.HTML?input=1195m(검색일: 2018년 9월 27일)

외교부, 2010 러시아 개황, http://down.mofa.go.kr/www/brd/m_4099/view.do?seq=367514

(검색일: 2018년 8월 10일)

우리나라 대륙철도 길 열렸다...北협조로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2018년 6월 7일).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07/0200000000AKR20180607092100003 HTML?input=1179m (검색일: 2018년 6월 8일)

일본. 인도태평양 지역개발 지원에 총력...중국견제. (2018년 8월 16일).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816010008114(검색일:2018년9월3일)

한러 전력·가스망 공동연구 추진···남북러 경제협력 '청사진'. (2018년 6월 22일).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6/22/0200000000AKR20180622158800003.HTML?input=1179m (검색일: 2018년 9월 1일)

Blackwill, Tobert D. and Jennifer M.Harris. "*War by Other Means: Geoeconomics and Statecraf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Edward N. Nuttwak. 1990. "From Geopolitics to Geo-economics-Logic of Conflict, Grammar of Commerce" National Interest (Summer), pp17-23.

Halford J. Mackinder. 1942. "*Democratic Ideals and Reality*". New York: Henry Holtand Company, p150.

Nicholas J. Spykman. 1994. "*The Geography of the Peace*". New York: Harcourt, Braceand Company. p41.

Saul B. Cohen. 2003. "*Geopolitics of the World System*". Maryland: Rowman & Littlefield. p13.

Smith, N. 2005. "*The Endgame of Globalization*". New York: Routledge. p147.

Strengthening the Initiative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in Process of Establishing a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Geo-Economic Approach

Jae Duk Choi

In East Asia, the East Asian policies of the powers- One Road One Belt initiative aimed at the realization of the Chinese dream and the integration of the huge economy centered on China, US Indo-Pacific Strategy to prevent China, Japan's strengthening of the US-Japan alliance and expansionism, Russia's New East Policy for Strong Russian Rebuilding- are strengthening their influence through the interaction of geopolitic and geo-economic. However, South Korea was not able to strengthen the geo-economic factors due to the division on the peninsula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he geopolitical crisis deepens.

This study tries to find ways to strengthen the initiative between the two Koreas in geo-economical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inforcement of the geo-economical factor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leads to the strengthening of the their initiative by engaging the great powers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member of the profit community. The Korean Peninsula will use the geopolitics of the Korean Peninsula strategically to contribute to peace and economic prospe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through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US, China, Japan and Russia connect with the Eurasia continent through transportation, logistics, and energy.

Keywords: Geopolitics, Geo-Economics,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East Asian Policy